

與野 양보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급물살’

상속세 방식, 유산세 → 유산취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견… 추후 논의 관련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제외 민생 회복과 거리 멀다는 지적 있어

정기권이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입장차를 줄이고 한발씩 양보하면서 모처럼 합의의 여야 협의의 처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상속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완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여 반대해 진전되지 못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반전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

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세

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것을 먼저 처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입장이어서, 한 발 양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여야의 논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입법 사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여야 합의의 길이 열리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 합의의 처리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그 외에 세가지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계속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한도 확대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 간 조율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엔 “지금 워낙 정국 대립과 갈등이 심한데, 이 정도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

외하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부유층이 과세 대상인 상속세 완화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민생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이 예상한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 비율은 평균 35.2%지만 실제 과세 대상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주최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보기’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필요하다”며 “상속소득을 노동소득보다 더 우대해준다면 조세중립성이 훼손되어 조세제도가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尹 탄핵촉구’ 장외집회 돌입… 與 일부 의원, ‘탄핵반대’ 시위

野, 광화문서 릴레이 발언 등 여론전 단식 투쟁·삭발식 진행하기도 與, 의총서 현재 기조 유지 결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야당이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장의 집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총을 거쳐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현재 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활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다.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릴레이 발언을 하는 등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단식과 삭발을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인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이 파면될 때까지 단식 투쟁에 나섰다.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화문 옆 경복궁역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다.

전진숙·박홍배·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지 98일째다.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계엄 이후 밤을 먹어도 잠을 자도 소화도 안되고 잠이 안 온다. 비단 저만 그러겠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수천만명의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그 부담을 가장했던 것이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책동했던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이 풀어줬다”며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릴레이 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을 만들어 현재 재판관에게 보내겠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현재 재판관에게 국민이 얼마나 절절하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장외투쟁 같은 여론전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후

취재진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단식을 통해 현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목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해 ‘맹운(윤석열)’으로 떠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 나와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흠결이 있는 탄핵 심판 선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서 탄핵은 각하돼야 한다”며 “의원들도 가만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현재 앞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늘 2시부터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의힘 박대출, 장동혁 등 의원들이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는 현재 선고가 날 때까지 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尹, 탄핵심판 선고 의식했다… 조용한 ‘관저정치’

선고 압박에 정치적 발언 자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나흘째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없이 조용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차분하고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압박 상황이라, 민감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이날인 9일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및 체포 이후

여당 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석방 이후 첫 접촉에서는 “당을 잘 운영해 줘서 고맙다”는 입장이 끝이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발(發) 여론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차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참석과 변호인단을 통해 극렬 지지층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다른 윤 대통령의 행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현재를 자극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한편, 이번주로 예상된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현재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현재가 이를 연속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에 당분간은 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고일이 확정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입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崔 대행 “맞벌이 전세임대 소득 200%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참석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 130%로 완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맞벌이 가구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20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 가구는 120%에서 200%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 사회에서 첨단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 실버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통 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에이지테크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